

‘민원 쇄도’ 광주 복구 ‘부산물 발효 악취’ 해결되나

광주 도심에 위치한 대형 도축업체가 인근 주민들을 악취로 괴롭게 했던 부산물 발효 시설을 자진 폐쇄했다.

이로써 악취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나 또다른 골칫거리인 소음에 대한 매듭은 아직 지어지지 않아 업체는 물론 행정 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20일 광주 복구 등에 따르면 양산동 소재 A 축산업체가 최근 ‘폐기물재활용시설 및 방지시설 변경(폐쇄) 신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폐쇄 신고는 A 축산업체 내 탈수·건조시설, 발효시설 1·2호기, 세정집진시설, 원심력집진시설 등 부산물 발효 및 자체 처리 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A 축산업체는 지난해 6월부터 이 시설들을 가동, 도축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발효해 퇴비로 만들었다.

시설 가동 전에는 부산물 처리를 다른 업체에 맡겼으나, A 업체는 비용 절감을 위해 자체 처리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부산물을 발효하는 과정에서

양산동 모 업체, 최근 환경부에 처리시설 폐쇄 신고 수거 방식으로 전환...기존 도축장 소음 문제는 여전히

발생하는 악취가 A 업체와 인접한 지역까지 퍼지면서 발생했다.

실제 A 업체로부터 반경 1km 내엔 공동주택단지 약 4천700세대가 거주하며 인근에 업체 200여개와 연세초등학교, 양산중학교가 위치해 있는데, A 업체가 부산물 자체 처리를 본격 실시한 지

난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복구에는 총 708건의 악취 민원이 접수됐다.

이와 관련, 최기영 복구위원은 지난해 2월 열린 복구위원회(이하 회)에서 “A 업체의 도축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악취에 인근 주민들과 산단 입주업체 직원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복

구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사유 시설인 탓에 행정 기관에서 강제력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복구는 문제 해결을 위한 TF팀을 꾸렸고 A 업체 및 지역사회와 소통에 나섰다.

그 결과 A 업체는 지난 9월12일부터 부산물 신규 투입을 중지했고 그로부터 한 달여 뒤인 10월29일 자체 처리 시설 가동을 중단했다. 부산물 처리는 가동 전처럼 업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가동 중지 이후부터 현재까지 A 업체로부터 접수된 악취 민원은 한 건도 없

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도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소음에 대한 뚜렷한 해결 방법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구 관계자는 “대다수를 차지했던 악취 관련 민원은 자체 처리 시설 운영 중단 후부터 사라졌다”며 “소음을 줄이기 위해 도축장 내 방음 시설이 설치되긴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업체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안재영 기자

‘17명 사상’ 학동 참사 항소심 선고 해 넘긴다

현산 측 변호인들 추가...변론 재개·감정 요청

재판부, 기각 대신 오늘서 내년 2월6일로 연기

9명이 죽고 8명이 다친 광주 ‘학동 붕괴 참사’의 책임 소재 등을 다시 따지는 재판의 결과가 또 한 번 해를 넘기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지난 2021년 6월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에서 있었던 붕괴 참사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HD 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관계자들, 다원이앤씨 관계자들, 백솔건설 대표 등 7명과 법인 3곳(현산, 백솔건설, 한솔기업)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다음 해 2월6일로 변경했다.

이들은 해체계획서를 무시한 채 철거 공사를 하거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17명을 사상케한 학동 참사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재판의 변론은 사건 접수 2년여만인 지난 10월8일 종결돼 이달 21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앞서 현산 관계자 중 한 명이 변호인들을 추가 선임하면서 일정이 바뀌게 됐다. 이 중 일부는 ‘전관 출신’으로 알려졌다.

새롭게 선임된 변호인들은 재판부에 변론 재개와 함께 ‘감정 신청’도 요청했다.

변호인의 감정 신청이 무엇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재판부가 기각한 것에 비추면 법정

다툼을 이어갈 여지가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변론 재개 요청도 기각했다. 대신 선고 기일을 두 달여 연기했다는 대목에서 서면 제출 등을 통한 소명 기회는 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결정들은 다음 해 2월 중순께 예정된 인사이동 전 현재 재판부가 항소심 판결을 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다만, 변론 재개에 대한 결정은 철저히 재판부의 소관이라 예정이 바뀔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편 이 재판의 1심에서 하청업체 관계자들은 징역 1년~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원청인 현산의 관계자들 예겐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던 만큼, 항소심에서 형량 변동이 있을지 관심이 있다. /안재영 기자

5·18재단, ‘허위사실 유포’ 이영일 전 의원 고발

‘5·18민주화운동특별법’ 위반 혐의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개입설을 주장하는 칼럼을 기고한 이영일 전 국회의원이 고발당했다.

20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광주시와 이날 오전 광주경찰청에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허위 사실 유포 금지) 위반 혐의로 이 전 국회의원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전 국회의원은 지난 5월20일 인터넷 신문 매체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민항쟁에 북한의 적극적인 공작이 가미되지 않는다면, 광주에서와 같은 내란형 폭동은 결코 발생치 않는다” 등의 주장이 담긴 칼럼을 기고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단은 “최근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조사위원회의 국가보고서를 통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특수군 개입은 거짓’임이 밝혀졌음에도 칼럼을 통해 온·오프라인상에서 논란과 갈등을 만들고 있어 사회적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고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재단은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과 서울지역 인터넷신문 기자, 광주 도심가에 왜곡 현수막을 건 가가호호공명선거대안당·민경욱 대표, 자유민주당·고영주 대표를 각각 왜곡 표현을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5·18민주화운동 왜곡과 폄훼는 희생자와 그 유가족을 2차 가해하는 행위”라며 “이 같은 주장은 임법자들의 규범적 결단과 사회적 합의에 어긋나는 일임으로 엄중히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성학 기자



겨울철 동파 방지 안내문 부착. 절기상 소설(小雪)을 이틀 앞둔 20일 광주 복구청 기후환경과 수질보전팀 직원들이 관내 한 공공화장실에서 겨울철 동파 방지를 위해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이중 투표’ 유도 신정훈 의원 법정서 혐의 인정

“지지 호소 성격은 아니다” 주장...내달 11일 재판 재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전 선거구민들에게 ‘이중 투표’를 유도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국회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신 의원은 지난 3월4일 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20여명의 선거구민에게 권리당원 사실을 숨기고 일반 시민 자격으로도 투표하라는 등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증거로 문제가 된 신 의원의 발언이 담긴 영상을 제출했다.

이 영상에는 신 의원이 “권리당원이냐고 물어보면 ‘아니요’라고 해야 (일반시민 여론조사에) 투표할 수 있다”고 한 발언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발언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지지를 호소하는 성격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 발언이 나온 배경과 취지 등을 들어 보겠다는 피고인 신문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요청을 받아들였고 다음 달 11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안재영 기자

남북동맹호사망선원 ‘50년만에 무죄’

50여년 전 반공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은 남북어선 동맹호 사망 선원이 검찰의 직권 재심 청구와 무죄 구청에 이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부(양영희 수석판사)는 20일 2020년 사망한 남북어선 동맹호 선원 A(1944년 출생)씨에 대한 재심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1971년 군산항에서 출항해 서해에서 어로 작업을 하다 남북됐다 돌아온 동맹호 선원이었다.

그는 동맹호 선장, 다른 선원들과 함께 북한에서 되돌아왔지만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자격정지 3년)을 1974년 확정 판결받았다. /안재영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SONY

Tape to USB/DVD
영상변환서비스

USB DVD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S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 1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 2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3 보관 장소가 줄어듭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캠코더·카메라 중고 제품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DVD 변환전문업체 스마트폰, 태블릿, TV, PC 모두를 위한 Type A, C 듀얼 USB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